

‘도시재생컨퍼런스: 도시재생네트워크 세미나’ 다양한 분야의 융합을 통한 도시재생 실행방안

김영빈 | 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국토연구원은 지난 2월 21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토연구원이 주관한 도시재생컨퍼런스: 도시재생네트워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문화 분야의 이선철 용인대학교 교수, 추미경 성공회대학교 교수, 하태석 SCALE 대표, 전통시장 분야의 김영기 시장진흥공단 부장, 강현수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사회적 경제 분야의 최정환 공간문화센터 대표, 이도형 정읍노인복지회관 관장, 장원봉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컨퍼런스는 문화·예술과 도시재생, 전통시장과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복지와 도시재생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총 9개의 주제발표를 진행하였다. 각 주제별 발표 후에는 다양한 분야의 융합을 통한 도시재생의 실행방안 등에 관해 토론이 이루어졌다. 다음은 이번 컨퍼런스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문화 · 예술과 도시재생

1. 문화를 통한 지역활성화(이선철 용인대학교 교수)

지역의 발전 단계를 살펴보면 초기 단계에서는 경제의 양적 성장이나 능률성 증진이 강조되고, 성숙 단계에서는 지역 간 형평성 제고나 균형발전 촉진, 안정 단계에서는 삶의 질과 생태 및 지속 가능성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이러한 문제는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며 농산어촌 지역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에서 가치를 실질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4P(Place, Program, Promotion, People)가 필요하다. Place는 시설공간 인프라 환경, Program은 자원 콘텐츠 상품, Promotion은 홍보 교류 네트워크, People은 주민 역량이다.

지역 활성화에서 문화는 좋은 요소다.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차별성을 통해 경쟁력 확보가 용이해지고, 그에 따라 스토리텔링과 이미지 창출이 가능하다. 또한 산업과 문화가 결합하면 고부가 가치 창출도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 인식의 부족과 실체의 모호함, 경험의 부재, 성과의 구체화가 어렵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문화재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흡인력, 구성력, 파급력을 중심으로 운영 주체의 헌신과 열정을 통한 고객 감동의 창출이 요구된다. 또한 주민 중심의 계획 수립 시 전문가 활용, 교육 및 소통의 구조, 갈등 조절을 위한 원칙과 매뉴얼 등 지역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더불어 주민의 권력화, 공무원의 경직성, 전문가의 비현실성 등의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역발전은 문화적 가치(문화공간 조성, 프로그램 제공) 발현을 시작으로 경제적 가치(지역산업,

소득창출)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가치(삶의 질 제고, 지역브랜드 강화)의 달성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지역문화정책의 도시재생 기여방안 (추미경 성공회대학교 교수)

21세기 도시재생의 새로운 맥락은 창조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시대 환경과 맞물려 ‘문화를 통한 도시(지역)재생의 관점’이 핵심 요소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바로 이런 맥락에 주목하고 있고, 도시재생과 지역문화정책의 이슈가 만나는 지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이 21세기 지역재생의 중요한 축을 형성한다 해도 지역재생정책을 전반적으로 대신할 수는 없다. 지역을 둘러싼 광범위한 환경과 사회구조, 구성원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관여하는 지역재생의 기법은 영역별로 다양하게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 동향으로부터 지역재생정책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개별 지역에 대한 물리적 재생에서 지역 기반의 통합적 재생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들 수 있다. 이것은 기존 하드웨어적 접근에서 소프트/휴먼이 결합된 총체적 접근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둘째, 지원제도의 변화다. 상향식, 장기 지원, 파트너십 강화, 커뮤니티 재생 등 주민의 주체적 개입과 주도성이 점차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셋째, 지역재생에서 문화적 요소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창의성이 중요해진 21세기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문화를 활용한 지역재생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넷째, 문화도시, 창조도시 등 도시 간 국제 경쟁구조가 대두되고 있다. 유럽문화도시(수도), 창

의도시 네트워크 등이 제도화되면서 도시 간 국제 경쟁구조가 강화되고 있고, 유럽에서 시작된 이러한 흐름은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책의 시사점도 국내 동향으로부터 다음 네 가지를 정리할 수 있다. 첫째, 2000년대 이후 개별 단위 지역개발에서 통합적 지역재생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도 지역 고유의 특성에 기반을 둔 통합적 관점의 지역재생정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둘째, 2007년 이후 여러 중앙부처에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정책에 주목하고 있다. 이것은 문화산업 및 창조경제, 삶의 질 고양 등과 관련해 부처별 정책기조에 문화 관련 정책프로그램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셋째, 하드·소프트·휴먼을 강화하는 종합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물리적 개선 위주의 지역개발 관행이 여전히 강하고, 지역주민들도 수동적 시대의 참여자에서 진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적 실체가 허약하다. 넷째, 지역재생의 접근 방식에서 연계와 교류, 운영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 지역재생은 개별 지역이나 프로젝트 단위를 뛰어넘어 정책과 지원을 연계·교류함으로써 자원, 공간, 사람을 지역재생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3. U-City를 접목한 도시재생

(이재용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도시재생과 U-City의 융복합 효과는 제도적 효과, 경제적 효과, 사회적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제도적 효과는 신도시형 U-City에 비해 실체가 뚜렷하지 않았던 기존 도시형 U-City 추진의 당위성을 마련하는 것이고, 상위계획인 유비쿼터스 도시

계획과의 연계 및 도시재생과 관련한 타 법률과의 연계를 통해 도시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경제적 효과는 관련 U-서비스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민간부문의 산업을 촉진하고, 도시 내 중복투자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확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사회적 효과는 침체되고 있는 기존 도시지역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생활만족도 증대 및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안전 취약지역, 경제활동 침체지역 등 도시환경 개선효과도 탁월하다.

기존 도시형 U-City 서비스의 예를 살펴보면 소방·화재 등 안전과 관련한 영주시 소방안전서비스와 화재상황 알림이 서비스가 있다. 이것들은 지역 거주민과 재난 담당자의 신속한 연결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한 다양한 마을만들기 주체 간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부산시 산복도로 도심재생지도 서비스는 지역개선을 위해 시민 스스로 커뮤니티 공간을 관리하는 자생적 재생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4. 건축예술과학의 융복합성과 공공예술 (하태석 SCALE 대표)

도시재생과 공공예술이 결합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공공예술을 통해 도시공간에서 무형의 가치를 창출한다면 경제성과 효용성 측면에서 효과가 크다. 더불어 지역의 자원과 공공예술이 결합하여 경제성을 창출하고 문화 체험기회 확대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공공예술은 거주민의 삶과 환경에 능동적으로 개입·반응할 것이고 앞으로 전시, 컨퍼런스 파티, 출판, 영상물 등의 다양한 형태로 지역민에게 접근적

이고 지속적으로 다가가야 할 것이다.

종합토론

■ 강진갑(경기대학교 교수):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 재생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향후 도시재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임을 감안할 때 지역재생의 중장기적인 추진 활동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활동 또한 비중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

■ 박은실(추계예술대학교 교수): 열악한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다들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신도시 계획 등의 정책과 충돌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이 익숙하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을 통해 도시생태계 및 시장, 상권 등을 형성해야 한다. 도시재생은 지역의 모든 문화가 아닌 낙후된 지역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야 하는가 하는 도시재생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활성화가 목적이라고 하면 그에 맞는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실제로 경제적 활성화를 이루었는지, 이것을 통해 성과가 있었는지를 제시해야 한다.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은 뚜렷한 목적하에 명확히 접근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 황승우(바인건축사사무소 대표): 지역재생정책이 2000년대에 각 부처에서 다양하게 시행됨에 따라 지역개발이 통합적 재생으로 발전하였으며, 정책방향이 내부에서 외부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2007년부터 시작된 여러 사업에 수천 억 원

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결과 성과주의와 획일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한편 문화적 재생 관점에서 시간성과 공간성이 어떻게 연동되어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라는 면에서 볼 때 시간성과 공간성의 연동이 잘 구축된 도시가 바람직한 도시라고 생각한다. 수십 년에서 수백 년에 걸쳐 형성되어 있는 도시를 2~3년의 단기적 사업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삶의 양식을 배제한 채 사업이 추진된다면 문화의 독창성이 사라지며, 단순 획일적인 시설공간을 통해 문화예술재생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서로 공유하고 융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조광호(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도시재생에 있어 시스템 설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가치'는 시간성과 관계되는 것으로, 기존의 도시가 걸어온 과거의 시간으로부터 생긴 가치가 지금 살고 있는 가치와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새로운 가치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② 장소에 대한 미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문화가 사회적 가치와 만났을 때 어떻게 표출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 정착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며, 동시대적 가치에서 무분별하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③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사람의 가치를 만들어야 하며, 공동체, 커뮤니티 등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다. ④ 정책적 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각 부처에서 도시재생 및 문화

도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연계되거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연동하는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관련 포럼 및 워크숍 등이 부처 간 협동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최종철(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 사무관): 「지역문화진흥법」이 2013년 12월 제정·공포됨에 따라 지역문화에 대한 관련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역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①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속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②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있어 문화 하나의 요소로는 부족하며, 산업 등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재생이 필요하다. ③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발적인 활동이 필요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이 활발하게 활동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사업추진 시 지역주민 참여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④ 사업 추진 시 스토리텔링을 통해 지역 고유의 문화, 역사, 전통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박승기(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문화예술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활발히 진행되기를 바란다. 도시재생은 사람이 중심이며, 협업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 협업이라는 것은 국토교통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가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융합할 때 성공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문화의 영역이 다양한 만큼 문화관광부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서 「도시재생특별법」의 시스템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도시재생위원회를 통해 각 부처의 장관 및 위원이 협업을 거쳐 원활하게 협조할 것이다. 더불어

이번 컨퍼런스를 출발점으로 도시재생네트워크를 확대하여 각 분야별 라운드 테이블 수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통시장과 도시재생

1. 구도심 활성화정책의 성과와 과제

(김영기 시장진흥공단 부장)

상권이 침체된 속에서 전통시장, 상점가 등 상권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요소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효과에 한계가 있는 것을 감안하여 2011년 상권활성화제도 시범사업을 도입하였다. 상권활성화제도의 목적은 개별 단위의 기초상권 지원 효과를 배가시키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상권활성화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다음의 일곱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사업 준비기간의 단축이다. 현재 지원 대상 선정 이후 구역지정, 사업계획 수립·승인 및 상권관리기구 설치에 약 11개월이 소요되어 예산 집행의 지연 등 사업 부진을 초래하고 있다. 두 번째, 상권활성화 기본계획의 부재다. 현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과 상권활성화구역은 별도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변상권을 모두 포함한 중심상권 전체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세 번째 조직구성(상권관리기구)의 탄력적 규정이다. 각 지역별·도시별로 특수한 여건에 있는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각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다양한 조직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 탄력 있는 제도 개정이 필요하다. 네 번째, 상권관리기구의 자생력 강화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제공

하는 재원을 상권관리기구가 자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 번째, 타 부처 사업 연계지원 체계 구축이다.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여타 중앙부처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각 해당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중점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여섯 번째, 도시재생 차원에서의 통합 조정기구 설립이다. 쇠퇴한 도시의 재생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조정기구 설치 및 기본방침 설정이 필요하다. 일곱 번째, 모니터링에 의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제3의 기관에 의한 연간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대상 사업지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컨설팅을 추진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2. 성남시 수정로 상권활성화 사업

(강헌수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도심다핵화, 유통시장 개방,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시청사 이전 등으로 구도심 상권의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상실되고 있다. 이러한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문화와 결합한 상권이라는 키워드로 활성화사업을 시작하였다. 단계별 사업목표로는 1단계, 지역민이 사랑하는 장소 만들기(2012~2014), 2단계, 성남의 명소 만들기(2015~2016)로 총 두 단계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활성화사업의 세 가지 전략은 3S를 육성하는 것으로, Smart(공부하고 실천하는 상인 육성), Strong(강한 상인조직과 리더 육성), Special(특별함이 있는 점포와 상권 육성)의 단계별 맞춤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종합토론

■ 박소현(서울대학교 교수):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인재를 양성해야 할 뿐 아니라 사업 주체가 필요하며, 각 상권별로 그 특성에 따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또 도시건축뿐만 아니라 상권활성화 현장을 직접 경험한 전문가와의 협력방안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 최봉문(목원대학교 교수): 전통시장이라는 개념이 다소 무거울 수 있으나,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주제를 통해 도시재생 속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이 든다. ① 상권활성화사업 1차 선정 시 다양한 현장을 방문한 결과, 많은 지자체가 관심을 보였다. 3년이 지난 지금 상권활성화사업의 중간평가 결과 선정된 지역에서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 성과가 도시재생의 큰 틀에 묻히면서 사업방향에 혼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불량주택 개·보수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던 부분들이 「도시재생특별법」에 편입되었다. 사업 주체 측에서는 법이 어떻게 추진되고 예산을 확대할 것인가를 기다리다 보니, 현재 추진되어온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지 불명확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2차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고 3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도 도시재생으로 인해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 문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의 법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특별법 및 지원방식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진영호(두리공간환경연구소 대표): 전통시장과 상권만으로는 도시재생 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았을 때 구도심의 쇠퇴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교외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근본적인 상권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 중소기업청의 근원적인 역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구도심의 활성화를 논의할 때는 큰 틀에서 무엇을 그리고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상권활성화에 있어서 많은 이해주체들 간의 의견을 조정·조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상인회와의 갈등 및 마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도시재생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능력을 활용해서 풀어나가야 하며, 도시재생전략계획과 세부 활성화계획 내에서 여러 계획이 정리되고 각 부처별 패키지 사업을 현장의 상황에 맞추어 활용해야 한다.

■ 임준홍(충남발전연구원 기획조정연구실 팀장): 다양한 사례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전통시장을 통한 도시재생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여러 제도에서 상권재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전통시장은 「도시재생특별법」상의 근린재생계획으로 풀어가야 하며, 과급효과는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의 경우, 인구규모는 작으나 상권의 규모는 크기 때문에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상권 규모에 따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상권재생을 추진함에 있어 중소기업청 등과는 다른 창의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 변명식(장안대학교 교수): 현재 도심지역 내에 전통시장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나 상권재생 추진에 있어 법률이나 제도의 미흡으로 인한 문제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법률 개정 시 사업체 감소, 인력 감소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현장을 경험해본 결과, 상인들끼리는 협력이 아닌 반목현상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며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개념과 비전, 계획, 주체 의지가 중요하다. 또한 전통시장의 여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적합한 진단 및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박승기(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장): 전통시장이 도시재생의 앵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시재생은 사람 중심이며, 주민들을 위한 것이다. 「도시재생특별법」이 작년 제정되어 올해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근린재생형 중 중심시가지 활성화의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전통시장이라고 생각한다. 「도시재생특별법」에서 상권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면 법률상의 각 부처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상권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도시재생의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할 것이다.

사회적 경제 · 복지와 도시재생

1. 공간문화 기반의 도시재생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최정화 공간문화센터 대표)

도시재생은 지역에 대한 현실 인식부터 시작한다. 서울 중심의 사회경제적 관계망과 라이프 스타일로 인해 지역공동화 및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

다. 또한 공간·지역 차원에 대한 1차원적 접근 및 공간문화전략의 부재로 공적 자원 배분 및 관리의 왜곡, 비효율, 중복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역은 창조인력(젊은 계층)의 대도시 집중으로 인해 콘텐츠 생산, 유통, 소비의 자생성이 결여되고 있고, 지역문화 및 의사소통체계의 단절과 보수화, 폐쇄성, 고령화 등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들은 지역의 내발적 발전의 한계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 요소를 극복하면서 공간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해 지역재생을 이루는 방법은 창조인력의 라이프 스타일과 수요에 기반하여 지역의 눈높이에서 벗어나 글로벌, 수도권 수준의 눈높이에서 지역 역량 강화를 고민하는 것이다. 복잡한 이해관계와 공간제약에 의해 억압된 창조인력에게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창조에너지에 의한 콘텐츠 생산 및 소비를 근거로 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을 통한 컨벤션 효과와 지역 선순환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사회복지활동과 지역발전

(이도형 정읍노인복지회관장)

지역자활센터는 지역의 복지를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도시재생의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지역자활센터의 주요 사업으로는 자활의 욕 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기업의 설립 및 운영지원, 사회서비스지원 사업,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활센터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현재 자활사업은 정책과제인 탈수급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지방소도시 자족 기능의 회복을 위한 순기능이 저평가되고 있다. 두 번째, 취업·창업 중심의 자활사업단 편성요구로 인해 지역사회의 자족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사업단 운영에 제약이 많다. 이에 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필수산업 분야를 자활사업에서 흡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부처별 각기 다른 지역개발지원제도(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마을만들기, 협동조합 등)를 자활사업단이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활사업단이 스스로의 성장과정에 적합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근린활성화 전략으로서 사회적 경제의 의미와 과제 (장원봉 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

지역공동체로서 근린은 지역의 문제가 해결되는 구체적인 현장이고, 실질적인 시민 참여가 가능한 주요한 매개체인 동시에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협력의 사회적 자본이다.

지역사회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강화를 위한 최적의 인프라는 협동조합운동이다. 또한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린이 복원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주민 참여와 역량강화 그리고 자율적인 자원 동원의 가능성이 중요하다. 근린의 주체로서 주민은 자신들의 구체적인 필요성 인식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운동은 이를 훈련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지역활성화 전략으로서 사회적 경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면 다음 일곱 가지의 고려사항이 필요하다. 첫째,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영역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사회 역량강

화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 파트너십 구조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실천, 지역활성화 전략으로서 사회적 경제를 위한 지역사회투자기금의 형성이 요구된다. 셋째, 사회적 경제의 기여를 점검할 수 있는 다양한 측정도구를 개발해야 하며, 자원배분을 위해 정부와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역활성화는 결국 지역문제 해결에 대한 지역사회(근린)의 역량강화로 달성될 것이며 사회적 경제는 이를 위한 유용한 방안이 될 것이다.

종합토론

■ 최병선(가천대학교 교수): 도시재생은 쇠퇴하는 도시를 재활성화하는 것으로, 접근방식을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 등 인간의 모든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 이번 주제는 공간적 측면보다 사회적, 경제적 측면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진행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지난 10여 년 사이에 도시재생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종합적으로 국가의 정책과제로 추진된 결과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되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도시재생의 문제가 너무 근린재생에 국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근린의 활성화와 전체의 활성화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시재생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며, 물리적·경제적·사회적 측면의 통합적인 추진, 각 부처의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박경난(전주도시재생지원센터 총괄지원팀장): 사회적 경제에서 지역자원과 사회투자의 가치 창출을

위한 주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마을사업을 추진할 때 참여의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동의제를 발굴하고 참여자를 선별하고 사업 동력을 구현하는 방법론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채택하고 있다. 동력거점을 확보하고,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공동의 과제를 공유하며, 마을사업을 발굴하는 등 공동체 역량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도시재생은 총체적 문제이므로 지역주민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하고, 활동하여 공동체 회복에 기여해야 한다.

■ 신경희(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협동과 연대를 모토로 하는 만큼 도시재생을 하나의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사회적 경제를 연계하지 않으면 도시재생의 실패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한다.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이라는 큰 개념에서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도시재생은 기초지자체까지 이어져야 하는데 주민 및 사회단체 등이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성북구 장수마을의 경우, 빈민 주민에 관심이 있는 단체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행정안전부의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예산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 도시재생이라는 명목하에 어떻게 사회적 기업을 이끌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 김상일(그린순천21추진위원회 사무국장):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순천시는 원도심 재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순천의 경우, 대형마트가 출현함에 따라 소규모 상인들이 점차 사

라지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주로 사회적 경제는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사회적 경제의 조직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국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조직, 다른 하나는 경쟁을 통한 조직이다.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은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며,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사회적 기업은 수익성이 없는 상황이다. 처음에는 의욕이 높으나 정부 지원이 차단되면 해체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장사형 조직은 원활히 추진되나 추후 사유화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속시키려면 그에 따른 필요성을 찾고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의 관련성이 바탕이 되어야 함과 동시에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네트워크 및 협업이 필요하다.

■ 신동술(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사무관): 현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관련법을 입법화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추구하며, 그 모태는 2007년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2012년 법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도시재생 분야와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협업을 통한 큰 성과를 기대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과 도시재생 분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기업은 고용을 중심으로 지원하여 인건비 위주로 추진되고 있으나 향후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회적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익성 확보가 필요한 만큼 정부 및 지자체가 적절한 방법으로 수익성을 보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박승기(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특별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각 부처의 다양한 사업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경제는 도시재생에 있어 가장 많은 수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도시재생의 필요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생력을 바탕으로 지역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도시재생에서 사회적 경제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만큼 도시재생 선도사업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R&D에서 사회적 경제 측면으로 접근하려 하고 있다.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해서 사회적 경제가 성공하기를 바라며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도시재생네트워크를 통해 각 부처 간 협력방안 및 다양한 분야의 협력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